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 62만대 증산 협의 곧 착수

노조측 “대책위 구성 일정 앞당겨 협의”
노동강도·증원 여부 등 주요 쟁점될 듯

장기표류중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프로젝트가 ‘급불살’을 타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조만간 증산과 관련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회사 측과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5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

주지회에 따르면 전임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회계 비리 문제에 따른 파행으로 이달 말까지 1개월간 정회끼로 한 정기차의원대회를 예정됐던 4월1일보다 10여일 앞당겨 지난 20일부터 속개, 이날 마무리했다.

광주지회 관계자는 “논란이 된 사



기아자동차가 25일 VSM(차세대VDC)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선호 사양 등을 보강한 '2013년형 프라이드'를 출시했다.

기아차 '2013년형 프라이드' 출시

기아자동차가 25일 'VSM'(차세대VDC)을 기본 적용하는 등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2013년형 프라이드'를 시판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프라이드는 기존에 40만원 상당의 옵션인 VSM(차세대 VDC)을 비롯해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기본 적용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4 가솔린 모델의 주력 트림인 디럭스의 경우 가격을 30만원 인상했지만 VSM(차세대 VDC)과 15인치 알로이 휠, 열선 스티어링 휠 등 기본사양을 감안하면 40만원 가량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아차의 설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규모를 놓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인력 담당 임원들은 올해부터 전국 지방대를 돌며 취업특강을 진행하는 등 '자인방식' 인재 발굴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SK 대졸자 공채 지방대생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SK그룹이 대졸자 공채에 지방대생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SK는 올해부터 이러한 채용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향후 비중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이 2011년 지방대생을 30% 이상 선발하기로 한 적은 있었으

안들을 대의원대회에서 원만히 정리 했다”며 “증산과 관련해 2공장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간이 지체된 만큼 일정을 앞당겨 회사 측과 증산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62만대 증산과 전임 노조 집행부 회계비리, 주기2교대 시행 등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금협상 일정과 광주공장 증산 관련 협의 등을 감안, 대의원대회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개월 째 표류중인 62만

대 증산체제 노사 협의도 앞당겨 실시될 전망이다. 노조는 회사 측의 노동강도 완화 방안 등 중점처리 사안부터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협의가 진행되면 광주공장 증산의 핵심인 제2공장 생산을 현행 46.1 UPH(시간당 생산대수)에서 66UPH로, 3공장의 생산을 23.1UPH에서 26 UPH로 각각 늘리는 등 현재 연간 50만대에서 62만대로 늘리기 위한 인원 협의가 생길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산의 핵심인 기아차 광주2공장은 지난해 이미 증산설비를 갖췄으나

증산계획이 2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곳곳의 라인 가동이 멈춰있는 상황이다. 증산을 대비해 지난 2월 공고한 생산직 채용 역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증산에 맞춰 투자를 진행한 지역 협력업체도 애타는 심정으로 설비를 놀리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 대의원대회가 일찍 마무리되면서 노사협의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측은 준비가 끝난 만큼 조속한 증산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3억6000만원 반지 최근 3캐럿 이상의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 10여점을 선보였다. 이날 소개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격은 3억6000만원이며 전시된 반지의 총 가격은 15억원에 이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야 건축허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정차단속 공무원들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이 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

다. 지금까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왔다.

개정안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 주정차단속담당 공무원에게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권한을 부여한다. 지금처럼 자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만의 단속으로는 인력 부족 때문에 실질적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시설주(건설주) 및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의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중진공 호남연수원 '성공하는 신입사원' 교육 개설

중소기업 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박병연)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성공하는 신입사원의 목표설정과 생활설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은 신입사원의 매너와 에티켓,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창의적 사고

키우기 등이 주요 과목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중소기업 임직원 등이며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수비는 33만원이며 고용보험 환급으로 줄어들 수 있다. 문의(062-250-3035~3037). /임동률기자 exian@

중소기업 범위 12년 만에 대폭 손질

중기청 업무보고…투자·회수 쉽게해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일제히 사라지던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3대 중점 정책과제로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중소·중견 기업 육성 ▲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

위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중소기업 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통망 확장과 종합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업

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과 퇴직공제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특별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를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리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도 조성된다. /연합뉴스

나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규모를 놓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인력 담당 임원들은 올해부터 전국 지방대를 돌며 취업특강을 진행하는 등 '자인방식' 인재 발굴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위 개정된다.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중소기업 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통망 확장과 종합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업

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과 퇴직공제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특별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를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리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도 조성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77.67(+28.96)

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과 퇴직공제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특별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를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리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도 조성된다. /연합뉴스

▼ 코스닥지수 549.56(-1.69)

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과 퇴직공제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특별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를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리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도 조성된다. /연합뉴스

금리(국고채 3년) 2.58%(0.00)

▼ 원·달러 환율 1110.80원(-8.50)

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과 퇴직공제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특별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를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리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도 조성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77.67(+28.96)

▼ 코스닥지수 549.56(-1.69)

금리(국고채 3년) 2.58%(0.00)

▼ 원·달러 환율 1110.80원(-8.50)

▲ 코스피지수 1977.67(+28.96)

▼ 코스닥지수 549.56(-1.69)

금리(국고채 3년) 2.58%(0.00)

▼ 원·달러 환율 1110.80원(-8.50)

▲ 코스피지수 1977.67(+28.96)

▼ 코스닥지수 549.56(-1.69)

금리(국고채 3년) 2.58%(0.00)

▼ 원·달러 환율 1110.80원(-8.50)

▲ 코스피지수 1977.67(+28.96)

▼ 코스닥지수 549.56(-1.69)

금리(국고채 3년) 2.58%(0.00)

▼ 원·달러 환율 1110.80원(-8.50)

▲ 코스피지수 1977.67(+28.96)